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김주삼 조선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 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미·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 북핵위협,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통일, 공조체제와 협력, 북한의 자생력

* 이 논문은 2015년 12월 11일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와 대한정치학회의 공동연례학술대회(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다.

I. 서론

북핵문제는 남북대치상황에서 동북아지역 안정과 세계평화질서구축에 있어서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이다. 북한의 전략무기인 핵무기와 미사일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국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해결하고자 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개발 입장을 고수한다면 안보불안이 계속될 수 없는 난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북핵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대안은 무엇일까?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복합적 과제라는 점에서 한·미·중 3개국의 공조와 협력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3국의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북핵 6자회담 다자안보의 틀에서 9.19공동성명발표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설득해 봤지만, 결국 북한이 2008년 6자회담장으로 밖으로 뛰쳐나감으로써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여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5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지난 김정남 암살사건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는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북러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에서 이전보다 오히려 국제관계가 더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동안 동북아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핵문제가 현안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2기의 외교전략을 ‘아시아로의 회귀’로 결정 후 동아시아에 외교적 공세를 집중시킨 후 새로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였으며, 중국은 2013년 시진핑체제 등장 후 G2로 확고히 부상하여, ‘신형대국관계론’등을 주창하여 올해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창설과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전략’(한국국방연구원 2016, 57-61) 등의 대형 국가전략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보수우경화정책으로 급선회하면서 중국견제차원에서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미일동맹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충돌과 마찰도 점점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남북관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등장 후 북한과의 획기적인 교류와 협력적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남북 간 합의사항으로 성사된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다행히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간 남북관계가 회복되었다기보다는 소강상태였던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특정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우리 정부의 요원한 숙제이면서 미국과 중국 역시 북핵문제가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북한 스스로 이를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로 억제하고 폐기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는 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와 대북적대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북한 역시 대응차원에서 반미감정 강화와 대미 적대시정책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면 중국은 시진핑체제 출범 후 상당히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된다. 그것은 중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국으로서 책임국가라는 의무감에서 나온 발로로 보인다. 특히 G2로 부상, AIIB창설, 위엔화의 IMF 세계 기축통화 격상 등으로 중국은 이제 동북아지역의 특정 국가차원보다는 국제적 책임국가로서 북핵문제를 과거 전통적 북중관계의 특수관계가 아닌, 21세기 국제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미사일위협 대비 사드배치문제로 한중관계는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 북핵문제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한·미·중 3국의 공조체제와 협력이 더욱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강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김정은 체제 등장 후 돌출적이고 즉흥적인 도발적 행위가 언제, 어떤 행동으로 표출될 지도 모른다는 예측불허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분단과 정전체제에서의 미래 한반도 통일과제는 북한에 답을 기다리기 보다는, 차라리 동북아발전과 지역 안정적 차원에

서 북한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이 방법도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동북아정세변화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

1. G2체제와 동북아 정세변화

21세기는 중국의 부상으로 G2체제가 국제정치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시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아시아회귀전략(Pivot to Asia)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중동에 치우쳤던 미국외교정책기조를 아시아지역에 더욱 집중시켜 나갔다.(한국국방연구원 2016, 24-44) 그러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최근 IS문제와 국제테러 등 중동국가 및 이슬람세력과 관련된 국제적 문제를 미국의 외교적 전략에서 쉽게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른 문제보다도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석유문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우선적으로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체제 등장 후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을 위해 중국의 외교전략을 동북아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에서 점점 세계무대를 향해 팽창해 나가고 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국제질서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경쟁자로서의 라이벌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 미국과 세계문제를 놓고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최 후 지속적으로 중국의 국력신장이 국제적 현실로 나타나 중국의 위상과 그 영향력이 중국을 세계적 위치로 부상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방식을 중국을 기점으로 한 육상과 해상을 통한 중국의 외교적 폭을 더욱 확장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2013년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일대일로는 육상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이어 아시아-유럽-아프리카¹⁾를 하나의 벨트로 연결하여 향후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그들과 인접한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국가와 아프리카까지 원대한 자원외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에게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1차적 목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동안 이들 국가에 영향력을 미쳤던 미국의 지분을 그만큼 중국 쪽으로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세계전략은 점점 표면화 되어가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세계문제에 대해서 이미 중국과 미국이 전략경제대화, 유엔활동, 환경, 에너지자원, 인권, 국제테러 등 중국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문제 논의는 있을 수 없는 구조가 현실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미 중국은 세계수출1위 국가로 올라섰으며, 2015년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창설하면서 그동안 세계경제에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미국과 EU, 일본의 경제력을 대체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IMF가 발표한 위안화의 세계 기축통화 발표는 예상했던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현실로 나타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갈수록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중국은 최첨단무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우주산업과 해·공군력의 변화, 육군의 감축을 통한 신속한 기동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역과 남사군도 등에서 중국의 군사전략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중국의 입장으로 전개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대적하기에는 전력 면에서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과거 영국과 미국, 소련 등의 국력신장 사례를 검토해 볼 때,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지역에서 관리비용, 유지비 등에서 문제가

1) <http://www.etnews.com/tools>, “중국, 종횡 일대일로 철도대국” (검색일 : 2015. 11.25) 참조.

발생되고 군사력이 약화되었을 때, 아직 세계지역에 중국군이 배치되지 않고 계속 군비증강을 시도하고 팽창을 시도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아베정권 등장 후 보수우경화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일 동맹관계는 더욱 밀착이 심화되어 가는데 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일이 중국견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이해관계의 일치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미일동맹 공고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고, 중·일관계는 관계가 발전보다는 현상유지 정도의 선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더욱 팽창시킬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입장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국제운송로인 베링해 개발에 따라 러시아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동북아의 급 변화와 미국과 중국의 G2체제 등장으로 가장 치명적 피해를 본 국가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세변화와 함께 각국의 지도자들의 세계관은 현재의 북한 김정은 리더십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2011년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리더십은 정치력 미숙으로 국제관계의 악화를 불러왔다고 판단된다. 전통적 북중관계는 차치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에 대한 강한 반대입장 표명과 성명서 발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 등장 후 계속 최룡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측의 노골적으로 냉랭한 문전박대는 현재의 북중관계를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이 중국 건국기념일 열병식에서 그동안 그들의 전통적 우호국가였던 북한을 배제하고 오히려 한국의 박근혜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파격적인 예우는 북한의 현주소를 국제적으로 대변해주는 단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 북한의 국제적 고립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북한의 경제위기는 소련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1990년대 북한경제위기는 소련과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교역감소가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는데, “특히 석유, 원자재 등의 주요 수입 지원국가였던 소련이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주의 우호 무역에 의한 공급을 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대외경제 부문을 통한 수입 중단 및 감축은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전 산업부문에서 산업연관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195)

특히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은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고난의 행군기’를 겪었고,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의 리더십의 결여는 국제적으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체제 하의 주민 80%는 장마당 등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만으로 북한의 경제부문의 초보적 체제전환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병로 2013, 171-179)

지난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북한만큼 독특한 군부중심의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없었다. 3대 세습체제와 군부중심체제, 김일성주의로 무장한 북한체제는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의 지속으로 국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침체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중공업 우선발전노선, 군사경제군사 병진노선”(김병로 2013, 171-179, 183-193) 등 3대 경제정책에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남북한 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이 약 33조로 남한의 1,441조의 1/42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북한이 138만원(한화)으로 남한의 2,870만원의 1/20”(김병로 2013, 196)에 해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 탈북자수는 매년 2,000명씩 한국으로 계속 유입되어 2017년 기준 한국에는 약 3만 명의 탈북자가 정착해 살고 있다. 그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국제통화를 하고, 중간 브로커를 통한 송금

등 김정은 체제가 온갖 폐쇄감시체제를 강화해도 그 포위망을 뚫고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북한사회구조는 이들로 인해 그 실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는 이러한 현실적 변화를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여전히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현상이 계속 나타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고 하겠다.

김정은 체제 등장 후 장성택은 북한의 이와 같은 국제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고자 북중관계 개선 등의 일환으로 특구지역의 관료들을 중국으로 연수를 보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의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한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적인 면에서도 각국 공동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체제생존차원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겠지만, 이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태도에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북핵보유 입장고수정책이 그들 스스로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전까지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등장 후 한중관계를 더욱 밀착시켜 밀월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입장인 반면,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중관계는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 관계와는 너무 다른 입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단적으로 북중관계가 김정일 사망 전까지는 상당히 전통적 우호관계의 틀에서 북중정상회담 등의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 한중정상회담이 수차례 개최되는 동안 정작 전통적 우호국인 북중정상회담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데서 북중관계의 현주소가 나타나 있다. 북중관계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성장과정과 중국 문화대혁명시절 고난 시기, 리더십 등의 개인적 퍼스널리티(주장환 2012, 83-105)도 양국관계에서 전연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은 이를 돌파하고자 북러관계로 선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북러관계는 북중관계 만큼 북한에 실질적 이득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북일관계는 형식상 관계유지가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의 유일사상, 주체사상 측면에서 살펴

불 때 아직 북일관계는 미일동맹 공조체제 상황 하에서 북한의 대일정책과 일본의 대북정책에는 한계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난 박근혜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남북관계는 2015년 8월 지뢰도발 사건을 계기로 추석명절을 기점으로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특별히 진척된 것이 별로 없다. 이러한 남북상황은 예전에 남북회담 등도 개최한 바 있지만 북한이 북핵보유 고수 등 태도를 변하지 않는 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은 어렵고(이상준 외 2011, 132-140), 북한고립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와 고립국가는 북한당국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Ⅲ. 북핵에 대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1.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어 왔으며,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서 일본을 다음으로 두 번째 우방국에 해당한다. 1950년 미국은 북한 김일성의 북한의 남침을 평화파괴행위로 간주하여 북한과 6.25 전쟁까지 경험했으며,(한용원 2008, 339-350) 현재 정전체제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입장에서 북핵에 대해서 일관된 북핵불용, 북핵폐기,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대미외교정책의 목표는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 북한체제생존보장, 핵보유국 인정, 대북제재 완화조치 등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97-103)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결국 일본제국제국주의가 항복하여 종전을 이끌어 냈지만, 핵 투하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전승국가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무모한 핵무기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9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방법 재확인 과 미국의 북핵불용 입장발표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사항 실천을 표명

하였다.²⁾ 미국이 북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라고 판단된다.

첫째,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결의와 국제법을 위반하여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국제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중시키고, 국제안보와 평화유지에 노력해야 국가인데도 체제생존을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세계평화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관점이다. 1950년 김일성의 오판으로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 유엔군과 중국인 민지원군 등이 국제평화와 자국보위 차원에서 위해 참전하였지만 그로 인한 수백만의 전쟁희생자들이 발생하였으며(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2014, 124-133), 결국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중국, 북한 당사자 간 정전협정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은 오히려 국제적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은 올해 새로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신뢰를 더욱 격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둘째, 북핵 6자회담 파기 책임국가인 북한의 돌출된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북핵 합의 이후 북미관계는 상당히 진전된 듯 하였으나, 김일성 사후 북한의 폐쇄적 체제는 군부를 중심으로 선군정치를 강화하여 3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2005년 9.19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북한이 2008년 6자회담을 결렬시키는 불신을 초래하고, 김정은 체제 역시 2012년 말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여 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지역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제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하여 결국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³⁾ 그러나 북한이 북미관계개선이 없이 그들의 실리사회주의와 선군사상을 밀고 나간다면 계속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불안은 더욱 높게 나올 수 있다.(정창현 2008, 285-299)

셋째, 북 핵개발이 체제생존차원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시정평, 북한 유엔결의 위반 말라,” 중앙일보 2015/09/26.

3) “미 일각서 대화재개론...중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강조,” 동아일보 2016/10/24.

북미관계는 미수교상태이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우선적으로 상호신뢰 결핍으로 상호 간 불신감이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신뢰감이 오히려 충만해 있다. 이는 북한이 생존차원에서 핵실험의 지속은 결국 한반도 적화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상황의 연속이다. 정전체제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주둔해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 이러한 안보현실의 빌미는 모두 북한이 제공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버리고 진정한 체제생존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북핵을 폐기하면 미국은 이란과 쿠바와 같이 북한과도 충분히 북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넷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국제적 공유, 특히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군사교류목적에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과거 이란과 파키스탄과 군사고문단 방문 등 군사교류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 파키스탄은 1990년대 말 핵실험 당시 북한의 군사방문단을 방문하게 하여 파키스탄 핵실험을 관람하게 한 적이 있다. 파키스탄에서 핵 아버지라고 하는 압둘 칸 박사는 북한에 이미 방문한 사실을 밝혔고, 그가 북한을 방문한 목적이 양국가 간 핵과 미사일 군사교류라고 추정했을 때, 북-파키스탄의 핵-미사일프로그램 공유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례로 북한 방문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핵실험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이는 두 나라 간 핵개발프로그램의 공유와 협력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반증된다고 하겠다. 단적으로 북한은 당시 노동호 미사일은 있으나 핵은 미보유 상태였고, 파키스탄은 핵무기는 있으나 운반체인 미사일이 없어서 두 나라는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차원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주삼 2010, 39-59)

다섯째, 전략무기의 군사거래 차단차원에서 반대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중동국가들에게 많은 미사일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해 왔다. 북한은 최초 이집트로부터 미사일을 수입하여 역설계하여 미사일을 개발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제 미사일을 수입한 국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오만,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로 분석된다. 왜 이들 국가들은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가? 도대체 이 무기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미국은 현재 중동국가들과 적대적, 혹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정권이 지금도 활발히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 테러단체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국제안보 현안”⁴⁾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IS문제, 국제테러위협 등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미사일 수입출처는 국제적으로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미사일은 핵무기와 분리할 수 없는 전략무기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북한의 무기거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무기운반은 OMM, 결제는 단천상업은행”⁵⁾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은 북한과 중동국가들과의 군사무기 거래는 이유의 북한과의 경제적 이유가 있고,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해군 선박의 보수를 북한기업에서 위탁하거나 자국 무기 공장 신설을 북한 기업에 맡기는 국가”⁶⁾들도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면서 미국과 적대관계 혹은 일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최근에 이란과 쿠바가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여 고무적이긴 하지만, 북한과 중동국가 간 전략무기거래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주삼 2010, 47-51) 파키스탄처럼 미국과 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국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유했다는 점에서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대북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제 미사일은 중동국가들 외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국가들에게도 유입되었는지 국제공조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군사무기는 수출품목이다. 그러나 전략무기로 취급되는 핵·미사일이 국제 테러국가에 부정적으로 전용되었을 때, 이는 향후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은 당분간 북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 같이 국제적으로 무기거래가 불투명한 국가에 대해서는 감시망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4) <http://www.vcakorea.com>, “북한과 중동 테러집단 연계가능성 대응해야” (검색일: 2015.12.1) 참조.

5) “대북봉쇄방 구멍 많아... 유엔결의 위반 중 기업 제재 강화를,” 동아일보 2016/10/21.

6) 동아일보 2016/10/21.

2.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

김정일의 사망으로 등장한 김정은은 3년 동안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경제개발을 함께 시도하는 병진노선을 강행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북중관계, 북미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김정일 사후 북중관계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했는데 경제지원의 감소와 국제관계에서 북한의 지지 철회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입장과 경고성 성명발표 등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비핵화 3원칙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북한과의 전통적 친선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시대와 정세가 변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북중관계가 얼마 전까지 냉담했던 이유의 핵심은 북핵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⁷⁾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동안 중국이 왜 이렇게 북핵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자신의 국가적 이익차원에서 북핵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국가로 부상되어 있다. 그런데 전통적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우호국가인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은 중국의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국제적으로 북한핵문제를 우방국인 중국이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국제사회는 그 책임과 리더십 문제를 중국으로 화살을 돌릴 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안정 차원에서 중국은 결코 북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체제 등장 후 중국은 굴기하여 21세기 중국의 부흥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는 세계적 차원의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에즈라 보걸, 심규호·유소영 역 2014, 922-924) 그런데 북한의 지속적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북핵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사회의 맹비난, 특히 북핵문제로 야기되는 한·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는 중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25전쟁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북한이라는 지역적 분쟁 개

7) 연합뉴스, 中 화춘잉, “북중관계개선, 북핵문제해결에 도움,”(검색일: 2015.12.03).

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2008년에 결렬된 북핵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며, 다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최상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05년 공동성명 재개를 통한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과 참가국의 공동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⁸⁾

넷째,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북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반대하고 북핵 폐기 등 비핵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842년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역사에서 치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미사일발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중국의 카드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국가라는 입장에서라고 책임 있는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역시 국제평화유지에 책임국가로서의 역량의 한계를 가늠하는 입장에 설 명분이 없다고 하겠다. 이미 중국은 G2국가로 부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우호관계였던 북한의 단독 플레이가 중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3. 북핵에 대한 한국의 대응

북한이 5차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한국은 미국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⁹⁾ 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양국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장관(2+2체제)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여 일명 외교국방 확장역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북군사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¹⁰⁾ 이번 한미양국의 북핵 군사조치는 1990년대 초반 한국에 배치된

8) 뉴시스, “중국, 北核 6자회담 재개 촉구,”(검색일: 2015.09.19).

9) 연합뉴스, “사드배체결정, 사드 어떤 무기인가,” (검색일: 2016. 07. 08).

10) “美 전략무기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동아일보 2016/10/21.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대체할 정도의 미 전략자산무기인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을 한반도 전역에 '상시 순환배치'함으로써 북한 김정은의 북핵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양국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하여 “한미통합국장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와 새로 신설하기로 한 위기관리협의체(KCM)에서 미전략무기자산의 배치주기와 방식”¹¹⁾ 등에 대해서 조율하기로 하였다.

한미양국의 북핵 대응차원의 한국에 상시 순환배치되는 미국의 전략무기자산을 살펴보면, 동해에 로널드 레이건함(CVN-76) 핵추진 항공모함과 서해에 노스캐롤라이나 핵추진 잠수함, F-22F랩터/ 스텔스 전투기, B-2/스텔스 폭격기, B-1B/장거리 전략폭격기 등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몇 대 정도가 배치될 지는 미지수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계속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미사일(ICBM)시험발사를 계속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¹³⁾

한미양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해양 도발에 맞서 한미연합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¹⁴⁾ 이외에도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자체 계획에는 “3K계획(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능력”¹⁵⁾을 예상계획보다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

11) 동아일보 2016/10/21. 미(美) 전략무기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 문제는 한미양국이 명문화에 있어서 검토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아일보 2016/10/22. 참조.

12) 동아일보 2016/10/21.

13) 동아일보 2016/10/21.

14) “미 글로벌 핵전력 사실상 한반도 고정에 부담,” 동아일보 2016/10/22.

15) “구태의연하고 즉흥적인 對北 군사전략,” 동아일보 2016/10/22.

IV. 한반도통일에 대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1. 김정은 체제의 돌출행동에 대한 대응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3대 세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사회주의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에 있어서 군수산업의 발전은 결국 민간부문의 경제성장에 따라 군수산업이 발전한다는 점에서 군수산업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는 논리는 이론적, 통계적 사례와는 배치된다. 북한의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이미 소련과 중국,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실패 사례가 이미 나타나 있는데도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해 추진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불안한 현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군사 병진노선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모순점이 발견되는데 김일성 시기인 1980년대 합영법의 실패, 김정일 시기 2000년대 7.1 관리개선조치와 신의주 특구개발 실패 등 북한의 경제건설과 군수산업에 대한 병진노선 등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번에 처형된 장성택이 변경지역인 황금평과 나진선봉지구의 특구건설을 통한 낙후된 북한의 경제개선을 시도하고, 이를 통한 체제안정과 군수산업 우선정책에서 민간산업의 회생과 경제성장을 통한 북한경제건설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는지도 모른다.

그 정황으로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까지 북한은 특구지역에서 근무할 관료들을 중국 대학기관 등에 소조로 편성하여 국제연수를 보낸 바 있는데, 이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학습과 경제특구지역의 시찰을 통한 시야확대로 북한특구지역에 대한 관료들의 테크닉을 향상시키고자 한 목적으로 파악된 바, 같은 맥락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성택의 처형으로 이마저도 모두 중단되고 그동안 언론에 회자되었던 북한특구지역의 개발 역시 주춤한 상태로 머물고 있다. 현재 이러한

불황과 국제적 고립으로 북한의 경제는 점점 악화되어 최빈민국 서열에 끼어있다.

북한은 경제침체를 돌파카드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을 통한 군부의 사기진작과 주민통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일회성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체제를 개선하고 특히 체제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경제실패의 연속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아직 정치경험의 미숙과 국제외교적 경험이 미숙한 김정은 체제가 지난번 장성택 처형사건과 같이 한반도에서 돌출된 군사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은 북한 내부에서도 놀라운 일이지만, 유교적 전통 관념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입장에서 이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김정은의 우발적 돌출행위였음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돌출행위는 북한의 경제향상이 더디고 국제적 압박이 심화돼 국제적으로 고립이 지속될 때 한반도에서 지난 김일성이 오판하여 저지른 6.25전쟁과 같은 무력수단을 통한 전쟁 발발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돌출적 군사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이 공조와 국제협력 체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한국은 분단체제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대응책이 항상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북한지뢰도발 사건처럼 의연하고 안정된 안보대비태세를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국은 핵·미사일 전력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에 대비하기 위한 독단적 전략무기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장준익 2015, 337-352) 따라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현재의 한미연합체제를 통한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현재의 미군의 첨단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의 실시간 행동들을 모두 감시하고 돌출행동 가동 전에 즉각 작동될 수 있는 안보대비태세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돌출행동은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만약에 북한 김정은의 돌출행동이 나타날 징후가 보이면 이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사전에 조성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모든 대북지원 중단과 북한행동에 따른

유엔차원의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

셋째, 미국의 북한의 돌출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미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정전체제이다. 정전체제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의 유사시 행동은 유엔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동군사관리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유사시 이미 확보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로 속전속결로 한국의 심장부인 수도권을 선제적으로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탐지하기 위한 한국형 감시장비자산 확보와 국제정보공유체제는 필수적이다.

2. 정전체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현재 한반도 상황은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유엔군의 대표로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중국도 정전협정 체결국의 국가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역시 정전협정 체결국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남북한 모두 엄청난 국가적 전쟁참화를 가져다 주었는 바, 이의 재발방지와 향후 대응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결국 당사국으로 주도적 역할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1953년 정전협정체결 당시 최빈민국이자 약소국에서 이제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자, 경제성장도 세계10권에 진입하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남북분단문제를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통해 설득하고 나서는 중재국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민공감대와 여론결집이 매우 중요하다. 분단국으로서 당분간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고,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을 배제한 최강국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구상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민여론의 결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이동근 2015, 2-19)

둘째, 동북아발전과 협력에 북한의 참여유도이다.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

해서는 독일사례에서 보듯이, 한반도 주변국인 미·중·일·러 강대국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협력관계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282-284)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 목적을 체제생존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강력한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허상과 모순된 행동이 더 이상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문화해야 한다. 이 역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실리차원에서 한민족 문제에서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그 만큼 있다고 본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미국의 위협에 방어적 차원의 행동이라고 선전하지만 국제사회는 그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통일과정에서 무모하고, 그들의 체제생존을 위한 행동이 위험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에게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담보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요구를 꾸준히 전개하면서 북한을 체제전환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맹준호 2014, 233-265)

셋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결로의 국민공감대 조성의 실천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통일문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등 남북 간 할 수 있는 회담은 다 개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전협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홍보하고 미래 통일을 향해 가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통일문제가 나왔을 때, 정권에 따라 대북인식과 통일인식은 정권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해당 지도자의 세계관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결로의 전환문제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법안을 정비하여 여야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는 법제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처리를 해 발효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정부는 여야가 교체됨에 따라 분단문제, 통일문제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을 빚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교체에 따라 남북교류와 관계 등 많은 변화도 있어 왔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 사회단체 제각각이 아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나가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3.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북한은 현재 200여개 국가 가운데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역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도 북한만큼 식량난과 경제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나라는 드물었다. 그 이유는 다른 요인보다도 지도자의 인식과 지도층의 폐쇄적 사고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식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한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미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수는 이미 3만 명이나 되어서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북한사회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증언한다. 이미 북한은 이미 정상적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체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세 나라의 절대적 역량의 결집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한국은 동족으로서 미래통일을 달성해야 할 민족국가로서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국가모델은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에서 이미 우리가 취할 국가모델이 아닌 만큼, 이러한 모델로 미래통일국가를 설정할 수 없다. 북한은 한 국가로서 이미 보편적 가치를 상실했고, 인권마저 저버린 국가라는 점에서 더 이상의 한반도통일모델로 존재할 수 없다. 그 모델은 한국모델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국가모델은 반드시 한국이 주도해야 할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미래전략차원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중관계가 밀착되고, 북한의 돌발성 위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관리비용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은 북미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전제조건은 북한의 체제 생존에 대한 보장이 내용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주변국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은 심각한 불신관계가 팽배한 만큼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중국의 역할이다. 1992년 한중 수교이전 북한에 절대적인 국가는 중국이었다. 지금도 북한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 한편 갈수록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이미 90%라는 점에서도 절대적 차원을 넘어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은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해야 할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미래한국통일에서 당위성은 충분하고, 분단보다는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미래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 역할은 변경무역과 특구지역에 대한 중국의 자본과 기술지원, 한반도 통일국가를 향한 한중양국의 안정적 협력체제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핵문제로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는 한중관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핵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중관계에서 북한이 핵개발보다는 경제개선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V. 결론

한반도는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이다. 특히 북한이라는 폐쇄국가의 특성이 강대국의 강요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 심하다. 북한은 체제생존차원에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을 계속하려고 할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의 실효성에는 좀 더 지켜볼 사안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제재효과에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 한계는 과거 초강대국 소련이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다가 결국 붕괴된 것처럼, 그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취약한 북한의 체제의 건전성은 개방과 안정성은 조만간 종말을 고하

고 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비참한 종말이 오기 전에 이에 대한 한·미·중의 전략적 대응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북한체제가 안정되고 미래 한국통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미·중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전략을 우선 배제해야 한다. 그 전략이 강구되었을 때 북한의 돌발성은 예측불허의 돌출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반도평화와 동북아안정, 세계평화에 어떠한 로드맵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한·미·중의 공조체제와 협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첫째,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미래비전과 정책 그리고 실천의지가 확고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한·미·중 공동으로 정전협정체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되지 않고는 정전체제 상황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미·중 3국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북한에게 참여를 제안하고 유도해 나가는 4국체제 틀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으로 북핵폐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제시이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에게 핵폐기를 주장하면 비효과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개발된 북핵폐기를 제안하는 것보다는 향후 더 이상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중이 공동으로 제시해 나가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국가체제 생존에 대한 담보이다. 북한은 세습체제 국가이고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노력과 구체적인 대안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무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국가체제를 정상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미·중3국이 북한의 현실에서 눈높이를 맞춰 이에 맞는 현실적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한·미·중은 결국 북한체제전환을 시도해 나가야 한다. 북한사회주의

체제는 과거 어느 사회주의국가체제보다도 경직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련도 붕괴되어 결국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신념을 가지고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의 인식전환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3국의 공조와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더 절실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식량과 생필품, 의료서비스 등은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무대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의 국제관계는 상호 이익에 부합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다. 분단체제보다는 통일국가로 갔을 때의 중국과 미국의 이익, 중국의 국제적 책임국가로 갔을 때의 통일한국의 역할, G2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유지와 발전에 통일한국이 더 효과적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들도록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는 분단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북한 간 민족문제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상호연결되어 있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미래적 관점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병로. 2013.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 김주삼. 2010. “북한의 대 중동군사외교: 전략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5권 제2호.
- 맹준호. 201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금융협력 과제와 한국의 역할,” 『북한개발과 협력』, 서울: 오름.
- 에즈라 보걸, 심규호·유소영 역. 2014. 『덩샤오핑 평전』, 서울: 민음사.
- 이동근. 2015. 『여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이상준·임을출·남경민. 2011.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 장준익. 2015. 『북한 핵위협 대비책』, 서울: 서문당.
- 정창현. 2008.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서울: 선인.
- 조영남. 2013. 『중국의 꿈』, 서울: 민음사.
- 주장환. 2012. 『중국 5세대 정치엘리트 집단 및 특성』,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 중국 중앙문헌연구소 홍순도·홍광훈·옌킴. 2014. 『중국공산당역사 상』, 서울: 서교출판사
- 한국국방연구원. 2016. 『2015~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KIDA Press.
- 한용원. 2008. 『남북한의 창군: 미·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 오름.
-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etnews.com/tools>, “중국, 중형 일대일로 철도대국”(검색일: 2015. 11.25).
<http://www.voakorea.com>, “북한과 중동 테러집단 연계가능성 대응해야”(검색일: 2015.12.1).
- 연합뉴스, 中 화춘잉, “북중관계개선, 북핵문제해결에 도움,”(검색일: 2015.12.3.).
- 연합뉴스, “사드배체결정, 사드 어떤 문기인가,”(검색일: 2016. 07. 08).
- 뉴스시, “중국, 北核6자회담 재개 촉구”(검색일: 2015/09/19).
- “시정평, 북한 유엔결의 위반 말라,” 중앙일보 2015/09/26.
- “美 전략무기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동아일보 2016/10/21.
- “구태의연하고 즉흥적인 對北 군사전략,” 동아일보 2016/10/22.

투고일 : 2017년 3월 5일 · 심사일 : 2017년 3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27일

* 김주삼은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외교사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북한인권 실태와 해결방안』 (프라마북스, 2012)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조선족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디아스포라연구』 제10권 제2호(2016); "북한 시장경제 체제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제24집 4호(2016) 등이 있다.

〈Abstract〉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im, Joo-Sam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peculates on responses to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and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s the subject of national division, the U.S. is a responsible country in international issues and does not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hina is a traditional socialist nation and a supporter of North Korea. As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re international issues, to defend against Kim Jung-Eun's unexpected acts,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oad map of the North Korea issue,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continued a deterrenc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joint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hina has showed a negative posi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of the unstable security derived from the U.S.'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in a more concrete way towards world peace although it has continued trade of strategic weapon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to restart the summit talks and open multilateral security channels. Although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strange that South and North Korea depend on the logic of powerful countries for the resolution of a national problem. A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Unification issues, peaceful solutions presented by South Korea seem more persuasive than the solution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did not secure any international support. Howeve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need to develop uni-directional two-track strategie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alks with North Ko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North Korea.

Key words :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Independence of North Korea